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질문하는가?: 제14-21대 한국 국회 대(對)정부질문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김정연 | 연세대학교**

양준석 | 국민대학교***

| 국문요약 |

이 연구는 제14대부터 제21대 국회 시기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회의록에 대해 구조적 토픽 모형(STM)을 활용해 텍스트 분석하고, 국회의원들의 의제 설정 특성과 관심 주제 변화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의 지역구·비례대표 특성, 집권당 소속 여부, 연공서열(선수), 정당 성향 등이 대정부질문에서 제기된 주요 토픽에 미친 영향을 규명한다. 연구 결과, 첫째, 외교·안보·북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대정부질문의 주요 주제로 나타났으며, 이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과 대북정책 변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한다. 둘째, 야당 소속 의원들은 안보, 남북관계 이슈에 치중하는 한편, 다선 의원들은 국내 정치문제의 쟁점화된 논의를 주도했다. 셋째, 문민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며 양극화,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쟁점화되었고, 진보정당 의원들은 경제적 불평등과 구조적 문제를 언급했다. 이 연구는 각 정당의 특성과 의원 개인의 정치 경력을 반영해 한국 국회 대정부질문의 주제 발현에 대한 정량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국회의원의 관심사를 이해하는 의미를 갖는다.

주제어 | 대정부질문, 텍스트 분석, 구조적 토픽모형, 정치적 담론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6084255)

** 제1저자, 연세대학교 디지털사회과학센터 연구교수

*** 교신저자,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I. 서론

국회 대정부질문(Parliamentary Questions)은 입법부가 행정부에 질의하고 답변 받는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과 행정에 책임을 묻는 절차이다(Martin 2011). 대정부질문은 입법부의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과정에서 정부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국회의원이 정부 정책 및 행정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국민에게 정부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소통의 기능이 있다(김정부 2007). 이상적으로 대정부질문은 정책에 대한 공개 토론으로 이어져 정부 정책 평가 및 대안 조언에 기초하여, 정책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김태엽 2023).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부터 활발히 진행되던 대정부질문은 6.25전쟁시기에도 멈추지 않았다. 전쟁기 행정 간소화를 위해 지방 인사행정에서 중요 행정책임자들인 군수 직위가 상당 기간 공석인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무소속 김봉재(金奉才) 의원은 장관들이 ‘비료 및 양곡 조작업무’부터 수산조합장 임명까지 관여하고, 한국은행이 시중 은행화하여 서민 대출업무에 한국은행까지 매달리는 상황을 백두진(白斗鎭) 총리에게 지적했다(동아일보 1953.09.30.). 박정희(朴正熙) 정부 시기 1966년 7월 1일 민중당 요구로 정일권(丁一權) 총리와 내무·외무 장관이 출석한 상황에서 김대중(金大中) 의원은 유엔감시하에 남북총선이 실시될 경우 선거의 주체가 한국인지 유엔인지, 할슈타인 원칙을 포기할 용의가 있는지, 반공법을 개정할 것인지를 따져 물었다(경향신문 1966.07.01.). 이렇듯 대정부질문은 대한민국 위기와 성장의 주요 시기마다 정부 정책을 보충하고, 강화하며, 때로는 질책을 통한 수정을 가능케 한 도구로서 활용되었다.

원칙적으로 대정부질문은 국정운영의 책임성을 검토하는 의미 있는 포럼의 성격을 가진다(Martin 2016). 영국의 경우 매주 의회의 질문에 총리가 답변하는 총리 질의(Prime Minister's Questions)가 존재한다. 정부는 의원들에게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받는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주로 방역, 경제 지원 정책, 백신 접종 계획 등에 대한 현안이 다뤄졌다(Sanders 2020). 의원내각제 국가의 대정부질문 기능

관련 기존 연구는 정당이 연정 파트너들을 감시·관리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고, 선거적 중요성이 높거나 정책 갈등이 심한 의제에 대해 질문의 형태로 연정 내 통제 메커니즘이 작동되는 경향이 연구되었다(Höhmann and Sieberer 2020).

한국의 경우 대정부질문은 정기국회나 임시국회 기간 중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국회의원이 정부 각 부처 장관, 국무총리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김태엽 2023). 주제는 국정 전반에 걸쳐 다루어지지만, 필요에 따라 특정 분야에 한정되기도 한다. 국회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 이외 분야에 대해서도 이의 제기할 수 있어 위원회 중심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회의원 입장에서 의정활동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장이 된다(김태엽 2023). 결국 한국에서 대정부질문은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야당이 집권 행정부의 행동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이다. 또한, 공공 담론의 장으로 작용하며 정치적 논쟁을 촉진하고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역동적인 정치 환경을 고려할 때, 대정부질문은 주요 정치적 논란을 부각시키고 민주적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국회 대정부질문의 방송 송출은 1995년 KTV에서 시작하여(매일경제 1995), 2004년 개국한 국회방송(NATV)에서 실시간 생중계되어 왔다.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빅카인즈(BIGKinds)에서 국회 대정부질문이 생중계되기 시작한 1995년 10월 16일부터 제21대 국회본회의 대정부질문이 시행된 2024년 2월 23일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대정부질문” 키워드를 검색한 결과 총 46,047건의 기사가 노출되었다(빅카인즈 2024). 대정부질문은 언론과 국민의 관심사인 만큼 본회의 현장 상황이 국민들에게 실시간 전달된다. 하지만 대정부질문이 갖는 역사적 중요성이나 의정 활동의 핵심 기능과는 별도로 최근 대정부질문은 일부 의제에 대해서만 집중하거나 정쟁화된 의제가 반복적으로 언급되며 질의응답의 실효성이 문제시되기도 한다(김태엽 2023). 대정부질문 기간 참석의원의 수가 저조하거나 정치공방 수준의 질의응답이 이뤄지는 부분이 지적되었고(권지혜 2014), 언론에서는 국회가 행정부 견제나 정책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닌 소모적 논쟁을 반복하면서 대정부질문에서의 가짜뉴스 등장을 비난하기도 했다(김수현 2023).

이 연구는 국회 대정부질문의 텍스트 분석에 기초하여 국회의원들이 중점적으로

다루는 사안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한국 국회의원이 무엇을 질문하는지 분석한다. 연구대상의 시기와 방법 관련 제14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내용을 대상으로 대정부질문에서 제기되는 이슈와 내용을 구조적 토픽모형 (Structural Topic Modeling)을 이용해 분석한다. 특히 국회의원의 대표유형, 소속 정당, 선수와 같은 특성들이 어떤 토픽을 발현시키는지 살펴보려 한다. 이를 통해 역대 국회 시기별로 반복적으로 혹은 특징적으로 제기되는 의제를 추출하고, 해당 시기마다 정치적 관심사와 사회 문제를 도출하여 역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타난 담론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II. 기존연구검토

대정부질문 제도는 일반적으로 의회가 행정부를 구성하고, 내각 운영에 책임지는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실시된다.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대정부질문 제도에 대한 연구는 첫째, 의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매커니즘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한다(Meinel 2018). 이러한 연구는 의회가 행정부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필요한 정보 획득 수단으로 활용되는지를 평가한다. 의회는 대정부질문을 통해 행정부의 의사결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공공 이익 보호의 관점에서 행정부의 권한 남용 실태를 점검한다. 대정부질문 제도 연구는 주로 의회와 행정부 간 권력 균형을 살펴볼 수 있는 기제인지 분석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대정부질문이 정부 혹은 장관에 대한 신임 여부 표결 절차에 영향력을 확보했는지 분석함으로써 대정부질문의 정치적 중요성과 의미를 평가한다(Huber 1996). 이러한 연구는 다당제 의회 시스템에서 대정부질문이 갖는 질문 이상의 역할과 기능을 논의한다.

둘째, 대정부질문 제도가 국가의 정치적, 법적 구조에 따라 운영되는 양태와 그 효과를 검토하는 연구군이다(Russo and Wiberg 2010). 각국의 헌법 체계에서 대정부질문의 절차적 설계가 다르며, 이는 의회와 행정부 간 관계 형성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Raunio 1996). 의회가 정부로부터 정보를 요구할 권리는 의회의 법적 지

위에 내재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대정부질문이 강력하게 시행되는 국가에서는 정책 투명성이 증가하고, 정부의 책임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나타난다(Saalfeld 2000). 반면, 대정부질문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실질적인 견제 기능이 약화되고 의회의 감시 역할이 축소될 위험이 있다(Döring 1995). 또한, 대정부질문이 정당 정치의 전략적 도구로 활용될 경우, 정부와 야당 간 갈등이 심화되거나 정치적 쟁점화 과정이 부각될 수 있음(Vliegthart and Walgrave 2011)이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

셋째, 대정부질문 내용 분석 연구군으로서 주로 대정부질문이 정치적 담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예를 들어, 뉴스 보도에서 대정부질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언론 프레임을 분석하거나(Russell 2024), 소셜 미디어에서 대정부질문이 공공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소셜 미디어의 반응을 의회에서 정치인들이 반영하는지를 조사한다(Bollenbacher 2022). 이때의 소셜 미디어는 대정부질문 내용을 확산시키고, 이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구로 기능한다. 또 다른 연구에서, 대정부질문 내용이 포함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메시지를 해석하고, 정부와 의회 간 권력관계를 이해한다(AI and Khalida 2020). 이는 비판적 담론 분석 연구의 특성을 가지는데, 대정부질문의 언어적 특징과 정치적 의도를 해석하는 데 관심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정부질문이 단순한 질문과 답변의 형식을 넘어, 정치적 담론과 공공 의제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대정부질문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우 국회법 제122조 2항(정부에 대한 질문)에서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대정부질문의 형식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에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질문 절차는 의장이 “의원의 질문과 정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조정한다(국회법 제122조 2항). 또한, 대한민국헌법 제62조에서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해야 한다고 정하

고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62조). 이러한 특징에서 한국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혼합된 체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할 수 있다(김태엽 2023).¹⁾

한국 국회 대정부질문을 분석 대상으로 한 연구들로는 첫째, 국회의원의 질문형태와 당선유형, 행정부의 응답 양상을 통해 행정부와의 상호 관계를 다룬 연구(김병준 1989)가 있다. 둘째, 대정부질문과 국회의원의 정치적 행보를 다룬 연구들로, 대정부질문에서의 적극성과 이념적 성향이 재공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나(박상운 2020), 대정부 질문자로 선정되는 의원들의 특성을 규명한 연구(박상운 2022), 질의 태도와 발언을 의정활동 평가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박상운 2018)가 있다. 셋째, 정치 담화로서 대정부질문의 특성을 평가한 연구로, 대정부질문의 표현 및 언어적 전략이 대중 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 있다(이한나 2023).

이 연구는 대정부질문의 내용 분석을 목적으로 어휘 빈도와 주제를 분석해 대정부질문 텍스트가 갖는 정치적 경향성과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한국의 정치과정에서 대정부질문이 어떤 이슈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슈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해하려 한다. 이를 위해 텍스트 마이닝 방법론을 활용한다. 텍스트 마이닝은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해 텍스트 분류, 클러스터링, 온톨로지(ontology), 문서 요약 등 텍스트에서 도출할 수 있는 새로운 특징을 발견하도록 하는 기술이다(Feinerer, et al. 2008).

텍스트 분석 방법 중 문서에서 토픽의 등장 확률을 추정하는 토픽모형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인다. 모델의 가정은 간단한데, 문서가 주제의 혼합이며 주제는 어휘를 기반으로 추정된다(Arora, et al. 2013). 토픽모형은 문서에 배태된 의미를 도출하는 과정으로(Blei and Lafferty 2009), 기존 연구에서 잠재디리클레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방법을 활용한 논문이 다수 출판되었다. 잠재디리클레할당 방법은 생성적 확률모형(generative probabilistic model)으로, 문서집합은 문서에 배속된 토픽

1) 대정부질문은 보통 교육·사회·문화, 정치·외교·통일·안보, 경제 등 의제를 구분해 2~4일에 걸쳐 별도로 실시한다. “의제별 질문 의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해 결정하고, 질문 의원은 미리 질문 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 시간 48시간 이전까지 정부에 송부하는 과정을 거친다(국회법 제122조 2항).

들의 확률로 추론되며, 토픽은 단어들로 구성, 관측된다(백영민 2020; Blei et al. 2003).

이 연구에서는 잠재디리클레할당 방법에서 파생된 모델로 구조적 토픽모형(structural topic model, STM)을 활용한다. 구조적 토픽모형 분석은 ‘단어 주머니(bag of words)’, 즉 문서는 단어 모음이며 단어가 독립적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한다(Wei and Croft, 2006). 구조적 토픽모형이 다른 모형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텍스트의 속성 즉, 메타데이터와 토픽모형 결과와 연관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다. 토픽모형 결과는 토픽이 문서에서 발현될 가능성(prevalence)을 말한다(Robert, et al. 2014). 구조적 토픽모형을 활용한 대표적인 국내 연구로 송준모와 강정한(2018)의 연구가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의 익명성 수준이 게시글의 주제와 정체성을 분화시키는 요소라고 설명한다.

Ⅲ. 연구자료 및 분석방법

이 연구의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제14대 국회 시기부터 제21대 국회 시기까지 국회본회의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회의록 총 102개의 문서를 수집하였다.²⁾ 그리고 국회본회의의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국회의원별로 발언 내용을 추출³⁾, 인물별 발언 데이터 총 1,230개의 문서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⁴⁾ 이후 메타데이터인 국회의원의 지역구·비례대표 특성, 집권당 소속 여부, 선수, 정당을 코딩한 자료를 구조적 토픽모형 분석에 투입, 이들 속성과 토픽 출현 관계를 살펴보았다.

구조적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이유는 토픽과 메타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추정할

2) 분석대상 시기는 1993년 7월 3일(제162회 제2차 국회본회의)부터 2023년 9월 6일(제410회 제3차 국회본회의)까지이다.

3) 예를 들어 제14대 162회 2차 국회본회의의,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에 국회의원 박계동, 이성호, 김태식, 강삼재, 이부영이 참석하였고, 이들의 발언을 인물별로 추출하였다.

4) 분석대상 문서는 국회 시기별로, 제14대 23개, 제15대 148개, 제16대 44개, 제17대 178개, 제18대 319개, 제19대 211개, 제20대 163개, 제21대 144개이다.

수 있어 이 연구에서처럼 행위자 발언의 배경을 분석하는 경우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조적 토픽모형 알고리즘에서 토픽 발현가능성 추정을 위한 메타데이터 공변량은 메타데이터가 토픽이 추정되는 단어의 사용 빈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Robert, et al. 2014, 9). 이 연구에서는 대정부질문 주요 이슈 키워드를 도출함으로써 역대 국회 관심사를 해석하고, 발언자 속성을 메타데이터로 설정해 발언자별 의제의 차이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구조적 토픽모델링은 R의 ‘tidystm’ 패키지를 활용하였다.

구조적 토픽모형을 추정하기 전 데이터 사전처리 과정에서 명사들의 리스트만을 남겼다.⁵⁾ 또한, 숫자 및 문장부호 제거, 불용어(stopwords) 제거 순을 거쳤다.⁶⁾ 불용어 처리는 국회 본회의 회의록이라는 특수 코퍼스(corpus)의 단어들과 일반적·추상적 성격의 단어들을 포함하여 삭제 적용했다(<표 1>).⁷⁾ 모델에 투입된 변수는 국회의원의 지역구·비례대표 특성, 집권당 소속 여부, 선수, 정당이다. 지역구·비례대표 특성은 지역구=0, 비례대표=1로, 집권당 소속 여부 변수는 여당=0, 야당=1로 생성하였다. 국회의원 정당은 보수정당=1, 민주당계정당=2, 진보정당=3, 제3지대정당=4, 무소속=5로 나누어 코딩하였다.⁸⁾

5) 텍스트에서 정보 밀도를 고려할 때, 정책·인물·사건·개념 등 주요 정보를 전달하는 명사 중심 분석이 효과적이라고 보았다(Martin and Johnson, 2015). 형태소 분석은 KoNLP 패키지에 포함된 SimplePos22 함수를 사용했다.

6) 본 연구에서의 데이터 사전처리 방식은 텍스트 마이닝에서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수순을 따랐다(Grimmer and Stewart, 2013).

7) 불용어 처리는 <표 1>의 단어 목록 이외에도, “속개하기”, “답변간”, “국회의원님들”, “총리님” 등과 같이 합성어나 파생어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단어로 인식한 경우를 모두 포함·삭제하였다.

8) 한국 정당을 이와 같이 분류하는 것은 정치 세력 구도의 미세한 차이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한국 정당 체계의 역사적 연속성과 이념적 스펙트럼의 반영, 기존 양대 진영 외 구도를 포함하는 의미에서 기존 정치학 연구에서의 분류를 참조·설정하였다.

〈표 1〉 불용어

구분	세부	단어 목록
의정·의사	회의절차	본회의, 개회, 정회, 속개, 산회, 폐회중, 회의중지, 계속개회, 선포, 성원, 소관, 계양
	의사진행·발언	발언, 발언시간, 보충질문, 질문, 의사진행발언, 의사일정, 제안설명, 마이크
	보고·자료	정부, 대표발의, 보고, 보고사항, 업무현황보고, 답변, 대독
	안건처리	안건, 상정, 가결, 심사, 회부
	참석·참조	출석, 참조, 참고인, 의석
	운영	교섭단체
직책·직위	정부부처 관련	대통령, 총리, 부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장관, 법무부장관, 외무장관, 외무부장관, 교육부장관, 국무위원, 원장, 의사국장
	국회 관련	국회의원, 의원, 위원, 위원장, 국회의장, 의장, 부의장,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선배동료, 대표, 간부
의례 표현		감사, 사랑, 존경, 영광, 수고, 박수, 인사말씀
시간 표현		일시, 계속, 이번, 오늘, 다음
일반적·추상적 표현		부분, 경우, 정도, 내용, 얘기, 사실, 나머지, 관련, 생각, 문제, 상황, 오케이, 페이지

IV. 분석결과

텍스트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제14대부터 제21대 국회까지 국회 대정부질문 데이터에 사용된 단어와 빈도는 <표 1>과 같다. 역대 국회 중 대정부질문에서 가장 많은 단어가 등장한 시기는 제18대 국회이며 28,841개의 단어가 총 171,928번 등장했다. 역대 국회 중 제16대 국회 대정부질문 텍스트 데이터가 가장 작은 규모를 가진다.

〈표 1〉 역대 국회 대정부질문 데이터의 단어 수와 빈도

대수	14	15	16	17	18	19	20	21
사용 단어 수	6639	22547	4880	20454	28841	22576	17015	15883
빈도	19026	103840	13484	104817	171928	117197	83765	71528

역대 국회 대정부질문의 고빈출 단어는 다음과 같다(<표 2>). 주제적으로는, 제14대부터 제21대 국회까지 대부분의 회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북한”으로, 북한 이슈가 오랜 기간 동안 대정부질문의 중요 논의 주제였음을 보여준다. “미국” 역시 빈번하게 언급되며, 미국이 한국의 정치외교 담론에서 주요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심사 면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등 대통령 집권 시기 해당 인물들이 연관된 이슈들이 대정부질문의 주요 논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징적인 것은 제19대 국회 이후 “수사”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부패 스캔들이나 정치엘리트 감시에 대한 의회의 관심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정치적 논의 사항과 관련해서 초기 회기에서는 “개혁”, “정치”, “정권”과 같은 일반 정치 용어들이 다수 언급된 반면, 후기로 갈수록 “사건”, “의혹”과 같은 특정 사건을 지칭하는 단어에 대한 언급이 늘어났다. 이는 전반적인 정책 논의에서 구체적 사건 중심의 질문으로 변화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사드”, “배치”와 같은 국가 안보 관련 용어와 “세종시”와 같은 정책 쟁점이 특히 논란이 되었던 시기를 구별해 볼 수 있다.

<표 2> 역대 국회 대정부질문 데이터의 고빈출 단어

	14	15	16	17	18	19	20	21
1	북한 (304)	북한 (1290)	북한 (174)	북한 (1257)	북한 (2017)	북한 (983)	북한 (981)	북한 (480)
2	개혁 (154)	정치 (636)	미국 (120)	미국 (850)	이명박 (963)	사건 (593)	사드 (804)	사건 (433)
3	견해 (111)	미국 (525)	투표 (105)	일본 (503)	미국 (773)	수사 (574)	미국 (480)	윤석열 (408)
4	의장 (100)	정권 (479)	결과 (75)	한나라당 (484)	세종시 (741)	검찰 (571)	배치 (438)	검찰 (352)
5	미국 (86)	견해 (445)	이상 (59)	국가 (381)	정권 (685)	박근혜 (458)	검찰 (438)	문재인 (325)
6	김영삼 (85)	검찰 (397)	햇볕정책 (54)	정책 (373)	국가 (594)	국가 (429)	중국 (401)	수사 (323)
7	지원 (85)	의장 (352)	수정안 (53)	사건 (363)	사건 (571)	일본 (409)	수사 (293)	일본 (270)

	14	15	16	17	18	19	20	21
8	남북 (73)	김대중 (344)	정상회담 (53)	정치 (323)	정치 (493)	청와대 (362)	국가 (290)	미국 (266)
9	입장 (72)	사건 (343)	범안 (52)	입장 (322)	정책 (461)	새누리당 (354)	비핵화 (288)	국가 (250)
10	추진 (72)	야당 (339)	한반도 (51)	남북 (298)	중국 (456)	미국 (353)	일본 (267)	정치 (237)
11	외무부 (66)	국가 (309)	관련 (50)	필요 (289)	검찰 (452)	국정원 (352)	문재인 (264)	야당 (236)
12	선거 (59)	개혁 (300)	찬성 (50)	참여정부 (285)	한나라당 (448)	정권 (339)	청와대 (254)	이후 (229)
13	정치 (59)	정책 (287)	의결 (48)	정권 (277)	이상 (414)	정치 (337)	미사일 (251)	당시 (226)
14	회담 (58)	한반도 (281)	위원회 (47)	노무현 (271)	청와대 (407)	야당 (324)	한반도 (246)	검사 (214)
15	합의 (58)	일본 (266)	고폭실험 (45)	한국 (267)	결과 (400)	중국 (322)	이후 (244)	정권 (185)
16	정권 (55)	나라 (261)	열린우리당 (44)	한반도 (267)	당시 (399)	우리나라 (317)	안보 (241)	한반도 (183)
17	과거 (53)	입장 (246)	종료 (43)	이명박 (262)	수사 (395)	이명박 (287)	사건 (219)	정책 (174)
18	일본 (53)	수사 (243)	규정 (42)	이후 (260)	경제 (386)	나라 (275)	조국 (219)	입장 (169)
19	대책 (52)	안보 (227)	제출 (41)	협상 (258)	천안함 (379)	역사 (272)	정책 (216)	책임 (162)
20	이유 (52)	과거 (223)	해결 (40)	관계 (246)	이후 (376)	당시 (268)	정권 (215)	관련 (156)
21	이상 (50)	필요 (223)	입장 (40)	주장 (241)	민주당 (370)	이유 (267)	경제 (211)	우리나라 (151)
22	노력 (50)	이유 (222)	중국 (39)	회담 (237)	남북 (368)	이후 (266)	필요 (208)	자리 (151)
23	결과 (48)	자리 (217)	성명 (38)	관련 (235)	필요 (361)	관련 (261)	결정 (207)	나라 (148)
24	소란 (47)	이상 (213)	재석 (38)	후보 (232)	책임 (356)	이상 (249)	개혁 (206)	이상 (147)

	14	15	16	17	18	19	20	21
25	자리 (45)	책임 (213)	대안 (37)	검찰 (231)	잘못 (346)	필요 (246)	제재 (202)	중요 (147)
26	장내 (45)	선거 (212)	전자투표 (37)	경제 (225)	우리나라 (346)	이야기 (242)	합의 (201)	민주당 (146)
27	필요 (42)	우리나라 (207)	대북 (37)	중국 (225)	일본 (346)	한반도 (240)	평화 (188)	중단 (143)
28	문민정부 (41)	남북 (205)	가결 (36)	평화 (220)	중요 (338)	의혹 (237)	입장 (183)	이야기 (140)
29	국가 (40)	주장 (195)	찬반의원 (36)	당시 (217)	사업 (326)	자리 (231)	이야기 (176)	결과 (138)
30	책임 (40)	대책 (195)	원칙 (35)	한미 (212)	입장 (325)	교과서 (231)	중단 (175)	필요 (137)

다음은 대정부질문 참석 국회의원의 지역구·비례대표 특성, 집권당 소속 여부, 선수, 정당 속성과 토픽 발현 관계를 구조적 토픽모델링으로 살펴보았다. 최적의 토픽 수 K 는 stm 패키지의 searchK 함수를 이용, 토픽 개수를 5개에서 30개까지 설정하고 유보가능도(held-out likelihood), 의미적 응집도(semantic coherence) 값을 참고하여 결정하였다(Roberts et al. 2019). 유보가능도와 의미적 응집도는 높을수록 적합하다고 간주됨으로 각 국회 대수의 대정부질문 데이터에 맞추어 결정하였다.⁹⁾ <부록 1>은 각 진단값을 시각화한 것이다.

<그림 1>은 역대 국회 대정부질문의 고빈출 토픽 비중 분포를 시각화하였다. 각 토픽이 발현되는 단어들은 <부록 2>에 정리하였다. <그림 1>을 보면, x 축은 해당 국회 시기 각 토픽이 논의에서 차지한 비율을 나타내고, y 축은 논의된 다양한 토픽과 토픽이 발현되는 키워드들이다. 그림은 stm 패키지에 내장된 함수로 요약한 것이며, 토픽과 관련된 단어들을 추출하고, 토픽명을 라벨링해 그림에 추가하였다.¹⁰⁾ 대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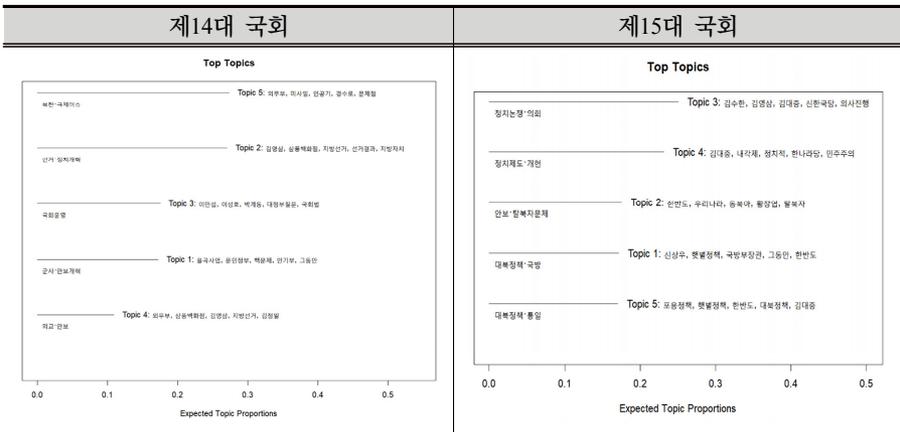
9) 의미적 응집도는 대부분 회기에서 $K=5\sim 8$ 구간에서 최고치를 나타냈고, 유보가능도는 과도한 토픽 수 증가가 모델 성능 개선에 기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 외 진단 지표를 고려하여, 모델의 수학적 수렴성, 계산 안정성 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고, 문서 수와 토픽 복잡도를 균형있게 반영하였다고 간주하였다.

10) 토픽명은 후술하는 <표 3> 목록을 일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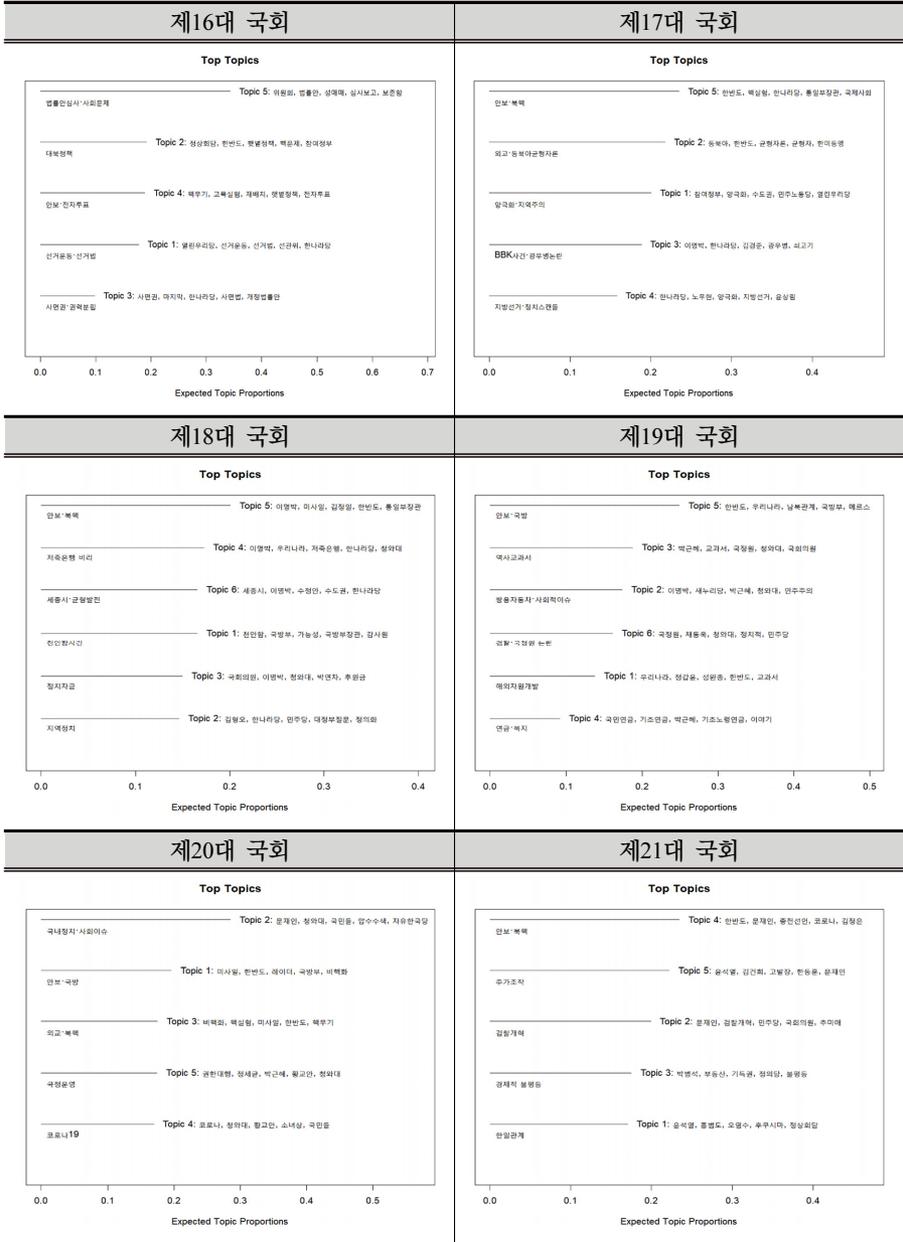
질문 데이터에서 논의된 주제들을 관련된 주요 단어들의 집합에 기반한 토픽의 중요성을 통해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최상위 고빈출 토픽과 관련 단어들을 대수별로 살펴보면, 제14대 국회에서는 북한·국제 이슈가 추출되었고, 관련된 상위 단어들은 “외무부”, “미사일”, “인공기” 등이다. 제15대 국회는 정치논쟁·의회 이슈가 다뤄졌고, 관련된 상위 단어들은 “김수환”¹¹⁾, “김영삼”, “김대중” 등이다. 제16대 국회는 법률안심사·사회문제가 최상위 고빈출 토픽이었으며, “위원회”, “법률안”, “성매매” 등의 단어들도 포함되었다. 제17대 국회는 안보·북핵 주제가 추출되었고, 관련된 상위 단어들은 “한반도”, “핵실험”, “국제사회” 등이다. 제18대 국회 역시 안보·북핵 주제가 추출되었고, 관련된 상위 단어들은 “이명박”, “미사일”, “김정일” 등이다. 제19대 국회도 안보·국방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졌으며, 관련된 키워드들은 “한반도”, “남북관계”, “국방부” 등이 나타났다. 제20대 국회는 국내정치·사회이슈가 추출되었고, 관련 단어들은 “문재인”, “청와대”, “압수수색” 등이다. 제21대 국회는 안보·북핵 문제가 주로 논의되었으며 “한반도”, “종전선언”, “김정은” 등이 키워드로 등장했다.

〈그림 1〉 역대 국회 대정부질문의 고빈출 토픽



11) 제15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이다.



<그림1>을 보면, 제14대 국회 시기는 “미사일”, “인공기”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대정부질문의 주요 관심사였다. 이후 제17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북한의 군사위협 토픽은 최상위 빈출로 다뤄졌다. 이와 달리 제15대와 제16대 국회, 그리고 제20대 국회에서는 국내정치, 사회적 문제가 대정부질문에서 우선 다뤄졌다. 제15대 국회의 경우 한국의 민주화 이후 김영삼(金泳三), 김대중(金大中) 두 정치 지도자들의 정치적 경쟁과 개혁 정책 등이 주요 의제로 대두된 것으로 보인다. 제16대 국회에서는 성매매 특별법과 같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입법 활동이 다뤄졌고, 제20대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 출범의 격동기에 청와대 압수수색, 권력기관 관련 이슈 등의 논의가 활발했다.

<표 3>은 토픽별 등장 단어를 기준으로 각 토픽을 명명한 것으로, 토픽명은 토픽과 대정부질문 속성 변수들과의 관계 효과를 추출하는 데 활용하였다.¹²⁾ 구조적 토픽 모형 분석은 주제와 메타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모델링하는 것으로, 특정 주제가 메타데이터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론할 수 있다. 구조적 토픽모형 기법은 EM(Expectation-Maximization)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이는 두 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단어들이 각 주제에 속할 확률을 계산(E-step)한 다음, 이 확률을 바탕으로 주제 분포를 추정하고 모델의 매개변수들을 최적화한다(M-step)(Romsaiyud 2016).

12) 토픽 라벨링은 FREX(Frequency-exclusivity) 지표를 중심으로 부여했다. FREX 지표는 주제에 따른 단어 빈도와 독점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토픽의 고유성을 파악할 수 있어 주제 요약에 적합하다(Bischof and Airoldi 2012). 이 외에도 유사 토픽 간 구분을 위해 Highest Prob(각 주제에 대해 가장 높은 발생 확률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단어), Lift(특정 토픽에 특화된 단어), Score(TF-IDF와 유사한 개념의 빈도 정보) 지표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백영민 2020; Chae and Olson 2021). 또한, STM 분석에서 토픽 라벨링은 연구자의 해석이 필요한 과정으로, 원자료(raw data)의 특성을 반영해 정치적 맥락, 이슈의 특징을 고려해 가장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주제 이름을 선정하였다.

〈표 3〉 역대 국회 대정부질문 출현 토픽명¹³⁾

제14대	제15대	제16대	제17대
T1. 군사·안보개혁 T2. 선거·정치개혁 T3. 국회운영 T4. 외교·안보 T5. 북한·국제이슈	T1. 대북정책·국방 T2. 안보·탈북자문제 T3. 정치논쟁·의회 T4. 정치제도·개헌 T5. 대북정책·통일	T1. 선거운동·선거법 T2. 대북정책 T3. 사면권·권력분립 T4. 안보·전자투표 T5. 법률안심사·사회문제	T1. 양극화·지역주의 T2. 외교·동북아균형자론 T3. BBK사건·광우병논란 T4. 지방선거·정치스캔들 T5. 안보·북핵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T1. 천안함사건 T2. 지역정치 T3. 정치자금 T4. 저축은행 비리 T5. 안보·북핵 T6. 세종시·균형발전	T1. 해외자원개발 T2. 쌍용자동차·사회적이슈 T3. 역사교과서 T4. 연금·복지 T5. 안보·국방 T6. 검찰·국정원 논란	T1. 안보·국방 T2. 국내정치·사회이슈 T3. 외교·북핵 T4. 코로나19 T5. 국정운영	T1. 한일관계 T2. 검찰개혁 T3. 경제적 불평등 T4. 안보·북핵 T5. 주가조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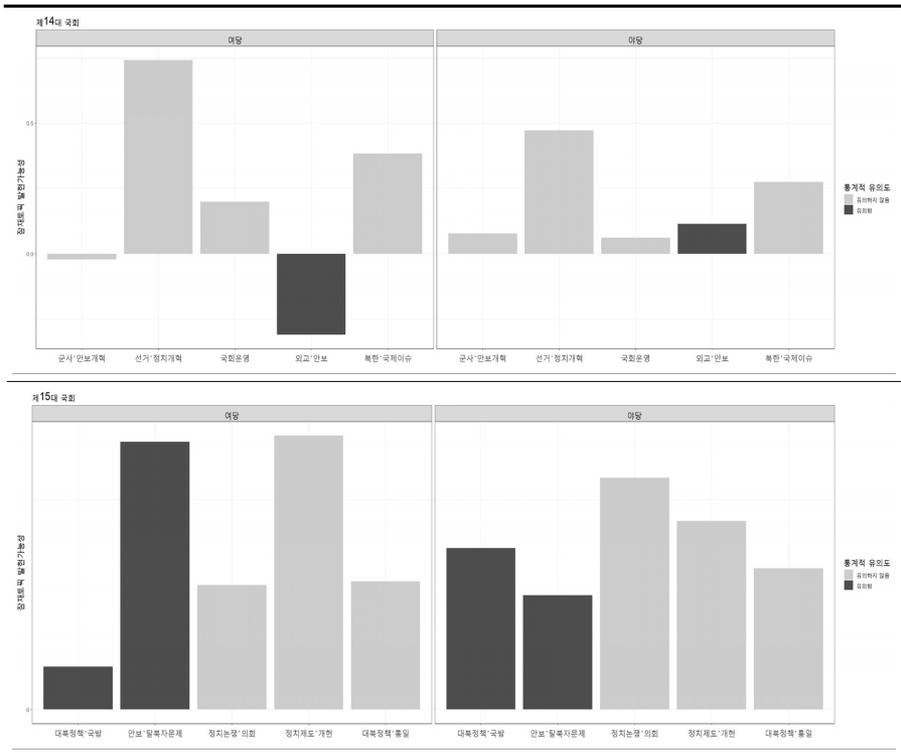
이 연구에서 국회의원의 지역구·비례대표 특성, 집권당 소속 여부, 선수, 정당과 토픽 출현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 중 토픽 출현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는 변수들만을 <그림 2>부터 <그림 5>까지 시각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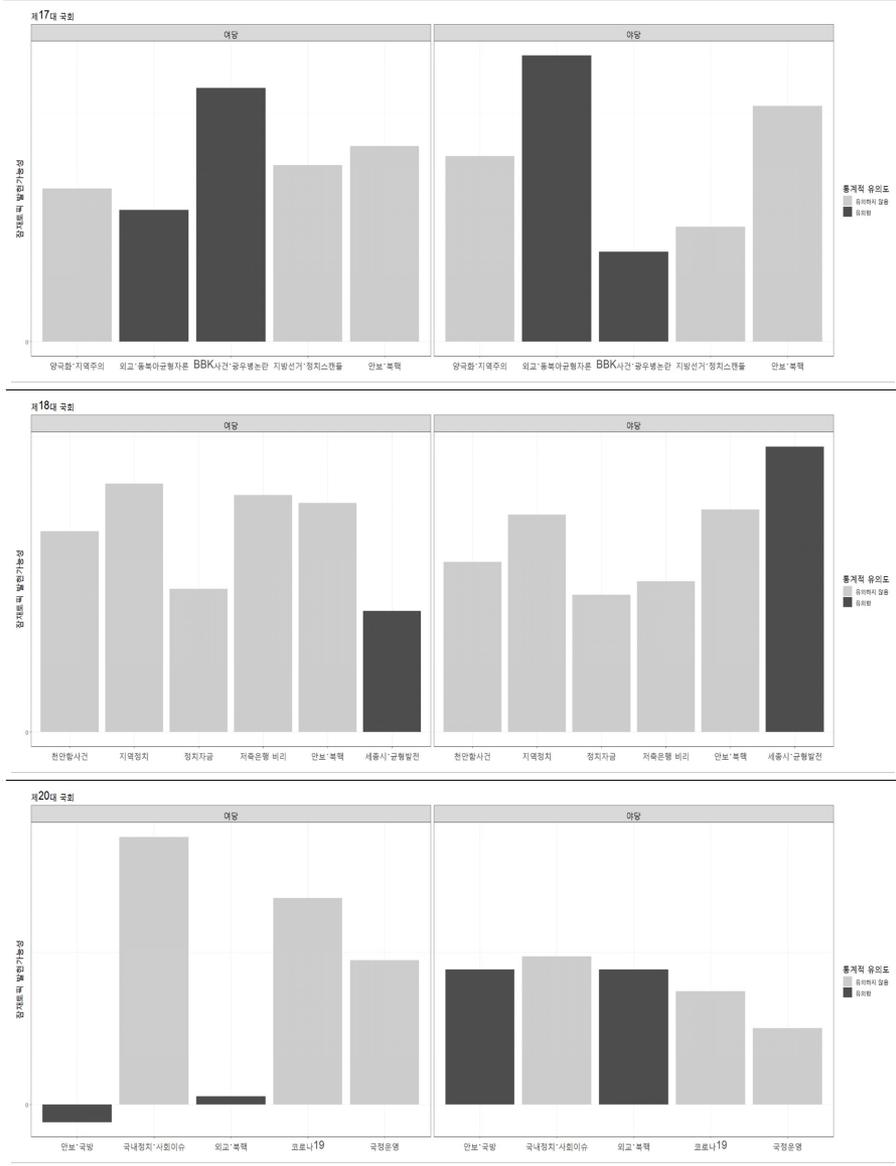
<그림 2>는 역대 국회 대정부질문 참석 국회의원의 지역구·비례대표 소속 속성에 따라 다루진 주요 토픽의 유의미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제17대 국회에서 지역구 의원은 외교·동북아균형자론 토픽 발현의 가능성을 높이는 경향($p < .1$)이 있었고, 같은 시기 비례대표 의원은 안보·북핵 이슈에 대해 지역구 의원보다 더 큰 관심이 있었다($p < .05$). 제19대 국회 역시 비례대표 의원이 안보·국방 이슈에 대해 지역구 의원보다 더 큰 관심을 보였다($p < .05$). 제20대 국회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구 의원보다 국정운영 관련 토픽을 다루는 경향이 있었다($p < .1$).

13) STM 도출 토픽의 내용과 각 회기별 상위 빈출어 분석이 연관되어 있으며, FREX 기준 상위 단어들과의 일치도도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특정 시기 정치적 이슈가 뚜렷하게 반영된 토픽 구조는 회기별 주요 담론을 효과적으로 재현하고 있다는 면에서 비지도 학습 모델의 내용 타당성(Grimmer and Stewart, 2013; Roberts et al. 2014)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3>은 역대 국회 대정부질문 참석 국회의원의 집권당 소속 속성과 토픽 출현 관계를 나타낸다. 제14대 국회의 경우 외교·안보 주제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발언 비중이 높았다($p < .1$). 제15대 국회에서는 대북정책·국방 문제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았고($p < .1$), 여당 의원들은 안보·탈북자 문제에 관심이 있었다($p < .05$). 제17대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외교·동북아 균형자론에 관심이 있으며($p < .05$), 여당 의원들은 BBK사건·광우병 이슈를 높은 비중의 주제로 다뤘다($p < .05$). 제18대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이 세종시·균형발전 의제 발현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제20대 국회는 야당 의원이 주로 안보·국방, 외교·북핵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발언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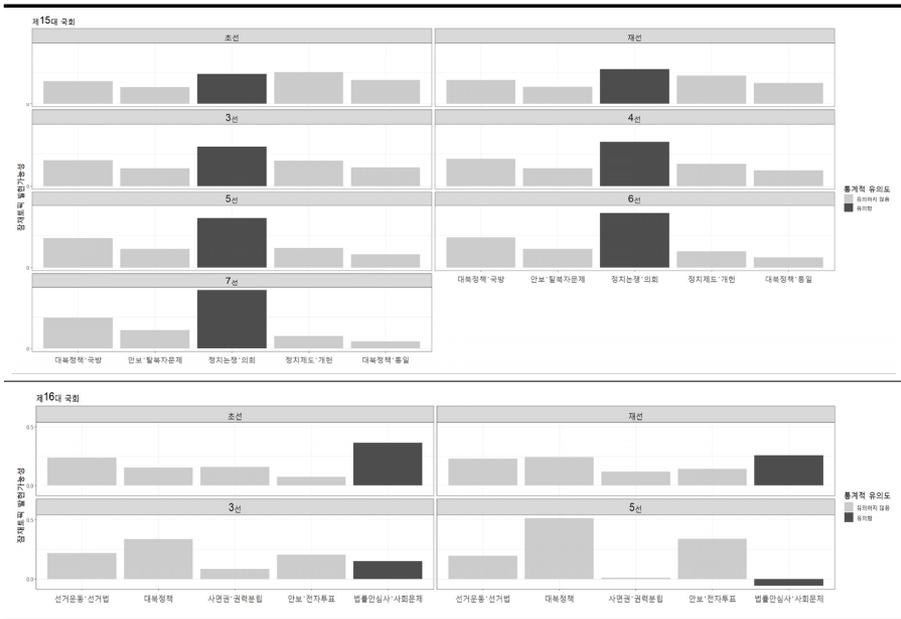
<그림 3> 국회의원 집권당 소속 여부와 토픽 출현 관계





<그림 4>는 역대 국회 대정부질문 참석 국회의원의 선수와 토픽 출현 관계를 나타낸다. 제15대 국회의 경우 다선의원의 정치논쟁·의회 토픽 언급 횟수가 높았다($p < .1$). 제16대 국회에서는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 법률안심사·사회문제에 대한 발언 가능성을 관찰할 수 있다($p < .1$). 이 주제 관련 단어로 “성매매”, “피해자” 등의 단어가 추출되어 신진의원들의 사회·범죄 문제에 대한 관심을 살펴볼 수 있다. 제17대 국회에서 다선의원은 양극화 문제에 집중했고($p < .1$),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서 안보·북핵 이슈가 중요한 이슈로 다뤄졌다($p < .1$). 제18대 국회에서 다선의원은 지역정치 관련 이슈에 노출량이 높았으며($p < .001$), 초·재선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주제 발언의 가능성을 높였다($p < .05$). 제20대 국회의 경우 다선의원일수록 국정운영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발언한 것으로 파악된다($p < .05$). 21대 국회에서 다선의원은 경제적 불평등을($p < .01$), 초·재선 의원은 안보·북핵 문제에 집중한 경향을 보인다($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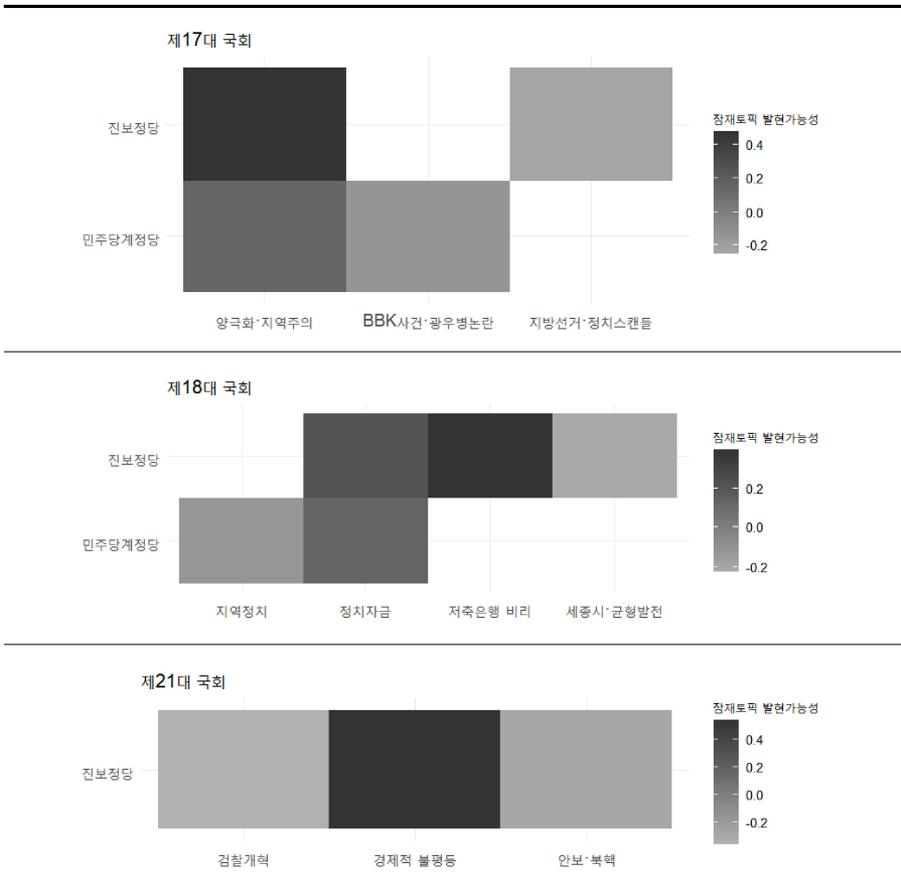
<그림 4> 국회의원 선수와 토픽 출현 관계





마지막으로 <그림 5>는 역대 국회 대정부질문 참석 국회의원의 정당과 토픽 출현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제17대 국회에서는 진보정당 소속 의원들이 양극화·지역주의 주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고($p < .001$), 제18대 국회에서는 진보정당 소속 의원들이 저축은행·비리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었다($p < .001$). 제21대 국회에서는 진보정당 소속 의원들이 경제적 불평등 주제 발현 가능성을 높였다($p < .001$).

<그림 5> 국회의원 정당과 토픽 출현 관계



V. 해석

한국 국회의 대정부질문 논의 주제는 각 정부 시기마다 발생한 주요 국내외 정치·사회 이슈, 북한 위기와 외교·안보 정책, 경제 개발과 민주주의 확립 등의 맥락에 닿아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정부질문의 주요 주제는 시기별로 변화하며, 정부가 직면한 정치·경제적 이슈에 따라 질문의 초점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Martin and Rozenberg 2014). 정치적 환경에 따라 국회 질의가 변화하는 특징을 보인다는 점은 국회의 정부 견제 역할과 공론장 형성 기능이 수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회 시기별로 한국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등장한 주요 토픽 키워드와 구조적 토픽모형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북한 및 외교·안보 이슈의 지속

국회 대정부질문의 고빈출 토픽을 살펴보면, 제14대,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1대 국회에서 외교·북한·북핵·안보 등의 문제가 최상위 도출되었다. 북한문제에 있어서 14대 국회(1992년~1996년)는 냉전 종식과 북한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 안보 환경에 큰 변화가 있었다. 남북한 긴장완화가 이어지며, 국회 대정부질문의 주제는 북한·국제 이슈에 집중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북한의 핵실험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지속가능성이 외교·안보 문제로 대두되었다. 제17대 국회(2004년~2008년)는 노무현(盧武鉉) 정부 시기로 북한의 핵실험과 남북정상회담의 배경에서 남북관계의 전개가 핵심 이슈였다. 제18대 국회(2008년~2012년)는 이명박 정부 시기로 ‘비핵개방3000’ 대북정책을 견지했고, ‘천안함 사건’(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2010년) 등의 국방 문제는 국회 대정부질문의 중요한 논쟁 주제로 부각되었다. 제19대 국회(2012년~2016년)는 이명박 정부 말기에서 박근혜 정부 초기 시기 북한 핵실험과 개성공단 운영 중단 사태로 인해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는 교착 상태를 보였다. 제21대 국회(2020년~2023년)는 문재인 정부 말기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시기로 문재인 정부의 남북 평화 프로세스, 종전선언 등의 논의를 주도하였고, 남북정상회담 등의

외교적 사건에 대한 정치적 발언권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대정부질문 참석 국회의원들의 개인적 속성이 토픽 발현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 토픽모델링으로 살펴보았는데, 야당 소속 의원인 경우 제14대, 제15대, 제17대, 제20대 국회에서 외교·북핵, 대북정책·국방 관련 아젠다를 추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4대 및 제15대 국회 시기 민주당계 정당인 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의원들의 대북 문제에 대한 관여도를 유추할 수 있다. 이 시기 금강산 관광 교류 활성화 문제(1998년), 연평해전(1999년) 발발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관련된 긴장 상황을 국회에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장영달 의원은 연평해전을 통해 대북 안보태세를 확인했다며, 북방한계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인천-연평도-백령도-몽금포-장산곶을 잇는 관광루트 개발”안을 제안하기도 했다.¹⁴⁾

제17대 국회 시기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 문제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기조를 연계하여 대북송금 관련 의혹이 대정부질문에서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김 전 대통령께서 지난번 방북 당시 공식적으로 북한에 준 돈만 해도 5억 불이고, 당시에는 산업은행 불법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지만 이번 방북 시 북한에 줄 돈은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와 같은 질의를 통해¹⁵⁾ 남북관계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이를 부각시키고 동시에 대북정책 관련 투명성 논란을 제기했다. 또한 17대 국회에서는 동북아 질서에 한국이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균형자론에 대해 그 방법과 적절성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사건(2019년),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2020년), 사드(THAAD) 배치 관련 논의가 대정부질문에서 다뤄졌다. 미래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2019년 11월 정부가 귀순을 요청한 북한주민 2명을 강제 북송했는데 반헌법적이고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라고 질문하고, 북한이 “이번에 다시 개량해서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는 그야말로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14) 제208회 제10차 국회본회의 회의록(1999.10.26.)

15) 제258회 제6차 국회본회의 회의록(2006.2.22.)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방사포입니다”, “최근 미국이 발표한 사드 업그레이드 계획에 따르면 사실상 성주에 배치된 사드가 전방으로 추진·운용될 수 있다는데 대중 안보 3원칙과 충돌”한다고 질의했다. 북한주민 복송 문제의 정부 책임자에 대한 수사 촉구,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한 정부의 대응, 한미·한중 관계를 둘러싼 외교안보정책의 실효성 문제 등에 대한 정부 정책을 지적했다.¹⁶⁾

2. 의회정치, 지역, 경제 담론의 진화: 다선의원의 경우

구조적 토픽모형 분석 결과 국회의원의 선수와 토픽 발현 사이의 일부 유의미한 패턴이 관찰되었다. 제15대 국회의 경우 다선의원일수록 정치논쟁 내지는 의회 관련 토픽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았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였고, 정치적 개혁과 협치, 이에 따른 정치적 갈등과 논쟁이 존재했다. 의회 운영 규칙이나 입법 관련 발언 등에 대해 의회 내 경험을 확보한 의원들이 해당 의제에 대해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며 이슈들을 주도하는 경향이 있었다. 신한국당 이세기 의원(4선)은 “국회의원 숫자, 200명 정도로 줄인들 어떻습니까? ... 선거구제도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꿔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등의 질의를 했고,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변화 등 정치 체제 개혁에 대한 발언을 했다.¹⁷⁾

제17대 국회에서는 다선의원일수록 양극화 및 지역주의 아젠다를 중점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관찰되었다. 노무현 정부 시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과 지역주의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지방분권 강조가 정치적 담론의 중심에 있었다. 특히 수도권 인구 및 경제, 행정 기능의 집중화와 지역 불균형 문제를 둘러싸고 지역 개발 요구가 국회에서 첨예하게 논의됐다. 양극화 내지는 지역주의 의제는 대정부질문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기에 적합한 주제일 수 있었다. 당시 열린우리당 장영달(4선) 의원은 빈곤층 문제를 언급하며 사회 양극화, 빈부격차 문제는 사회 통합의 기반을 훼손시킨다고 주장했다.¹⁸⁾

16) 제376회 제5차 국회본회의 회의록(2020.3.2.)

17) 제198회 제7차 국회본회의 회의록(1998.11.13.)

18) 제254회 제2차 국회본회의 회의록(2005.6.7.)

제18대 국회 시기 역시 다선의원일수록 대정부질문에서 지역정치와 관련된 주제를 언급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추진했다. 이 시기 다선 의원들은 지역구민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들을 강조하며 지역 정치를 중요한 주제로 부각시키는 데 집중한 측면이 있다. 당시 한나라당 정의화(4선) 의원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지방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방 발전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¹⁹⁾

제20대 국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권력형 비리와 검찰 수사가 핵심 사안으로 떠올랐다. 특히 다선의원들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에서 안정화와 문제 해결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이 이슈와 관련하여 “권한대행”, “청와대” 등의 키워드가 추출되어 국회 내 중진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국정운영 문제에 집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5선)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언급하며 ‘최순실 불법재산 환수법’, ‘탄핵 가결을 위한 촛불원탁회의’ 제안을 주장한 바 있다.²⁰⁾

제21대 국회에서는 다선의원일수록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 시기는 한국 사회에서 소득 불평등, 부동산 가격 급등, 자산 격차가 심화된 시기로 불평등 문제가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부각된 상황에서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혼선과 가격 폭등의 여파와 경제적 위기 문제는 대정부질문의 핵심 이슈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4선) 의원은 “공급에 대해서 야당을 비롯한 투기세력들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동산 가격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저금리와 그것에 기인한 풍부한 유동성 문제 아닙니까?”라는 발언을 하며 당시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²¹⁾ 하지만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임대차3법에 대한 부

19) 제278회 제8차 국회본회의 회의록(2008.11.3.)

20) 제349회 제7차 국회본회의 회의록(2017.2.10.)

21) 제384회 제4차 국회본회의 회의록(2021.2.4.)

작용, 중부세 완화 등을 통해 부동산 정책의 한계를 나타내기도 했고, 경제적 불평등 문제는 한국사회의 진영 간 갈등을 증폭한 측면이 있다.

3. 양극화, 경제적 불평등의 정치적 쟁점화

국회 대정부질문 참석 국회의원의 정당 소속이 특정 아젠다를 발현시키는지 살펴본 결과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14대 국회는 한국이 군사정권을 벗어나 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시기였다. 김영삼정부는 문민정부의 시작으로 민주주의의 제도적 확립을 위해 개혁 정책을 시도하였는데, 구조적 토픽모형 분석 결과 민주당계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선거·정치 개혁 토픽의 발현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 < .1$). 당시 민주당 이부영 의원은 “국민은 정권의 인기를 위한 ‘거품개혁’이 아닌, ‘내일이 있는 개혁’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군 인사 비리, 슬롯머신, 카지노, 동화은행사건” 등 당시 군부 세력에 대한 개혁 시도나 고위층과 연계된 금융권 비리 부패 사건 등에서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비판했다.²²⁾

진보정당의 경우 제17대 국회에서 양극화·지역주의, 제18대 국회에서 저축은행 비리, 제21대 국회 시기 경제적 불평등 관련 주제의 발현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정치적 대립의 주요 원인인 특정 지역에 대한 편중 문제와 구조적 문제에 대해 진보정당의 관심을 예측할 수 있다. 제17대 국회 시기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800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 차원을 넘어서 이제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빈곤 문제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²³⁾ 제18대 국회 시기 저축은행 비리 사건은 부실한 금융감독과 부패로 인한 금융 비리 사건으로 서민 금융 보호 의제가 진보정당의 주요 관심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제21대 국회 시기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한 정책 실패, 시장 안정화 등이 정치적 논쟁거리였다. 제21대 국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여성가족부 역할 강화, 쌍용자동차 노동자 정리 문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갈등 등의 이슈를 언급하며 불평등 문제를 쟁점화했다.²⁴⁾ 동시에 부자감세로 대

22) 제162회 제2차 국회본회의 회의록(1993.7.3.)

23) 제253회 제4차 국회본회의 회의록(2005.4.11.)

24) 제400회 제3차 국회본회의 회의록(2022.09.19.)

표되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축 정책을 찬성하며, 정치적 이익에 따라 변화하는 진보정당의 이중적 태도가 지적되기도 했다.

VI. 결론

이 연구는 제14대부터 제21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다뤄진 관심사의 패턴을 요약하고, 국회의원들의 지역구·비례대표 특성, 집권당 소속 여부, 선수, 정당 속성이 정책 의제 형성과 정치적 담론에 기여하는지를 밝혔다.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질문했을까? 대정부질문에서 국회의원들은 정치 리더십의 변화와 정치사회적 이슈에 긴밀하게 영향 받았지만, 북한과 미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있었다. 역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북·외교 정책 등의 이슈는 분석 대상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관심사였지만, 정부의 성과와 해당 시기 현안에 따라 집중 담론의 차이를 나타냈다.

빈출 단어 분석 결과 최근 시기의 대정부질문일수록 국가권력 남용에 대한 수사, 조사, 행동의 이유, 과정 등 법적 및 절차적 논의에 관련한 단어들이 부각되고, 특정 정치 인물 관련 단어 빈도가 증가하면서, 거버넌스와 권력비판에 대한 질문이 직접적으로 이뤄졌음을 시사한다. 반면 과거 국회에서는 남북관계 변동에 대한 책임성, 대형 사안들에 대한 국가적 책임 추궁 등이 주요 주제로 관찰되었다. 또한 국방·안보, 정치적 양극화, 검찰 수사 등은 각 국회마다 주요 의제로 부각되었다. 대정부질문의 양상이 국내외 대형 사건의 주요 흐름에서 특정 정치 인물·현상 중심으로 변화한 것은 정보 공유의 발달, 민주화의 내재화가 이뤄낸 결과일 수 있지만, 국회 내 합의된 기준 부재, 정보의 과잉, 정치적 양극화가 빚어낸 현상의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야당 소속 의원들이 국방·안보, 남북관계, 국제협력 등 국제적 이슈를 다루고자 한 양상이 관찰되었다.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은 야당의 주요 역할 중 하나로 국회의원들이 대북 정책 관련한 안보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는 모습이었다. 이는 국가의 주요 정책의 책임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황에서 비판적 관점으로 정권을 견제한 결과일 수 있기에 의원 질문의 일관성

역시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 다선 의원들의 경우 양극화, 경제 불평등, 지역정치 등 국내정치 문제와 의회정치 동학 등을 주목하는 양상을 보였다. 국회 내에서 축적된 정치적 경험과 의정 활동 기반 영향력을 통해 대정부질문에서 이슈를 주도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판단의 구체성·시급성을 확보해야하는 안보·북핵 문제를 외면하는 측면도 확인된다. 진보정당 소속 의원들은 금융 비리 사태, 경제 정책, 서민 금융 보호, 노동자 권리문제 등에 관심이 높았지만, 정책의 이중성도 확인된다.

그동안 한국 국회의 대정부질문은 과도하게 정쟁화된 경향이 있고, 정책적 사안에 대한 토론보다는 여·야 대립과 갈등의 공방이 심화되며 잦은 파행을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았다(이하경 2018). 이 연구는 대정부질문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과 정부 관리에 대한 국회의원 발언의 양태를 조망하였다. STM 분석은 비지도(unsupervised) 학습 방식으로 토픽 해석 시 필연적으로 주관이 개입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기반 이해와 원자료의 맥락을 병행 검토하는 방식으로 토픽 질적평가를 혼합하여 해석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한국 대정부질문이 정쟁의 도구로 변질되면서도 여전히 정책 의제 설정과 정부의 즉각적 책임성 확보와 관련된 제도적 공간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를 가진다.

참고문헌

- 경향신문. 1966. “통일문제·반공법 운용 등 대정부질문 전개” 『경향신문』 1966.7.1.
- 권지혜. 2014. “정의화, ‘대정부질문 무용론’에 일침” 『국민일보』 2014.11.5.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8830027> (검색일: 2025. 1. 10).
- 김병준. 1989.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영향력-본회의 대정부 질문의 분석.” 『한국행정학보』 23(1), 3-19.
- 김수현. 2023. ““한심하다 못해 절망감이...” 본질 없어진 대정부 질문”, 『프라이미경제』, 2023.09.12. <https://www.newsprime.co.kr/news/article/?no=612835> (검색일: 2025. 1. 10).
- 김정부. 2007. “정치와 과학기술의 관계에 관한 정치인의 인식에 있어 한국적 특수성 분석: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정책자료』, 1-47.
- 김태엽. 2023. “국회 대정부질문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제2057호. 국회 입법조사처.
- 동아일보. 1953. “국회대정부 질의 계속.” 『동아일보』 1953.9.30.
- 매일경제. 1995. “KTV 국회본회의 실황 25일까지 생중계”, 1995.10.16.
<https://www.mk.co.kr/news/economy/1504996> (검색일: 2025. 1. 10).
- 박상운. 2018.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지표의 보완: 의원의 대정부질문 행태와 종합적인 이념 평가방법 제시”. 『사회과학연구』 34권 3호, 73-97.
- 박상운. 2020. “현직의원의 이념과 대정부질문이 재공천에 미치는 영향: 17~20대 총선 분석.” 『현대정치연구』 13권 3호, 5-49.
- 박상운. 2022. “정당지도부의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자 선정 요인: 제16대~ 제19대 국회를 중심으로.” 『의정논총』 17권 1호, 5-35.
- 백영민. 2020. 『R을 이용한 텍스트 마이닝』(개정판). 서울: 한울아카데미.
- 송준모·강정환. 2018. “메갈리아의 두 딸들: 익명성 수준에 따른 온라인 커뮤니티의 정체성 분화: 익명성 수준에 따른 온라인 커뮤니티의 정체성 분화.” 『한국사회학』, 52권 4호, 161-206.
- 이하경. 2018. “고성에 실랑이까지...‘청문회’ 된 대정부질문”, KBS. 2018.10.5.
- 이한나. 2023. “한국 정치 담화에서의 무례 전략 분석: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을 중심으로.” 『언어와 언어학』, 102권, 27-55.

- Arora, Sanjeev, Ge, Rong, Halpern, Yoni, Mimno, David, Moitra, Ankur, Sontag, David, Wu, Yichen, Zhu, Michael. 2013. "A practical algorithm for topic modeling with provable guarantee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 PMLR, 2013. 280-288.
- Al Ghezzezy and Khalida Hashoosh. 2020. "Manipulation in Interpellation of Iraqi Parliamentary Discourse." *Utopía y praxis latinoamericana: revista internacional de filosofía iberoamericana y teoría social*, 1: 12-23.
- Bischof, Jonathan. and Edoardo M. Airolidi. 2012. "Summarizing topical content with word frequency and exclusivity." In *Proceedings of the 2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 (ICML-12)*, 201-208.
- Blei, David M., and John D. Lafferty.. 2009. "Topic models." In *Text mining*. Chapman and Hall/CRC. 101-124.
- Bollenbacher, John, Niklas Loynes, and John Bryden. 2022. "Does United Kingdom parliamentary attention follow social media posts?." *EPJ Data Science*, 11(1): 51.
- Chae, Bongsug, and David L. Olson. 2021. "Discovering latent topics of digital technologies from venture activities using structural topic modeling." *IEEE Transactions on Computational Social Systems*, 8(6): 1438-1449.
- Döring, Herbert. 1995. *Parliaments and Majority Rule in Western Europe*. MZES.
- Feinerer, Ingo, Kurt Hornik, and David Meyer. 2008. "Text mining infrastructure in R."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25: 1-54.
- Grimmer, Justin, and Brandon M. Stewart. 2013. "Text as data: The promise and pitfalls of automatic content analysis methods for political texts." *Political Analysis*, 21(3): 267-297.
- Höhmman, Daniel, and Ulrich Sieberer. 2020. "Parliamentary questions as a control mechanism in coalition governments." *West European Politics*, 43(1): 225-249.
- Huber, John D. 1996. "The vote of confidence in parliamentary democrac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0(2): 269-282.
- Martin, Shane. 2011. "Parliamentary questions, the behaviour of legislators, and the function of legislatures: An introduction." *The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17(3): 259-270.

- Martin, S. G. 2016. "Parliamentary Questions and Open Government." In *Parliamentary Questions and Open Government Era*, 43-67. [http://repository.essex.ac.uk/21048/1/PQs and OG.pdf](http://repository.essex.ac.uk/21048/1/PQs_and_OG.pdf).
- Martin, Fiona, and Mark Johnson. 2015. "More efficient topic modelling through a noun only approach." In *Proceedings of the Australasian Language Technology Association Workshop*, 111-115.
- Meinel, Florian. 2018. "Confidence and Control in Parliamentary Government: Parliamentary Questioning, Executive Knowledge, and the Transformation of Democratic Accountability."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66(2): 317-367.
- Martin, Shane, and Olivier Rozenberg. 2014. *The roles and function of parliamentary questions*. Routledge.
- Margaret E. Roberts, Brandon M. Stewart, Dustin Tingley, Christopher Lucas, Jetson Leder-Luis, Shana Kushner Gadarian, Bethany Albertson, David G. Rand. 2014. "Structural topic models for open-ended survey respons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8(4): 1064-1082.
- Raunio, Tapio. 1996. "Parliamentary questions in the European parliament: Representation, information and control." *The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2(4): 356-382.
- Roberts, Margaret E., Brandon M. Stewart, and Dustin Tingley. 2019. "stm: An R Package for Structural Topic Models."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91(2): 1-40.
- Romsaiyud, Walisa. 2016. "Expectation-maximization algorithm for topic modeling on big data streams." 2016 IEEE 7th Annual Ubiquitous Computing, Electronics & Mobile Communication Conference(UEMCON). IEEE.
- Russell, Meg, and Lisa James. 2024. "Representation of the UK Parliament's Power in the National Media: Too Weak, or Too Strong?" *Parliamentary Affairs*, 78(1): 1-26.
- Russo, Federico, and Matti Wiberg. 2010. "Parliamentary Questioning in 17 European Parliaments: Some Steps towards Compariso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16(2): 215-232.
- Saalfeld, Thomas. 2000. "Members of parliament and governments in Western Euro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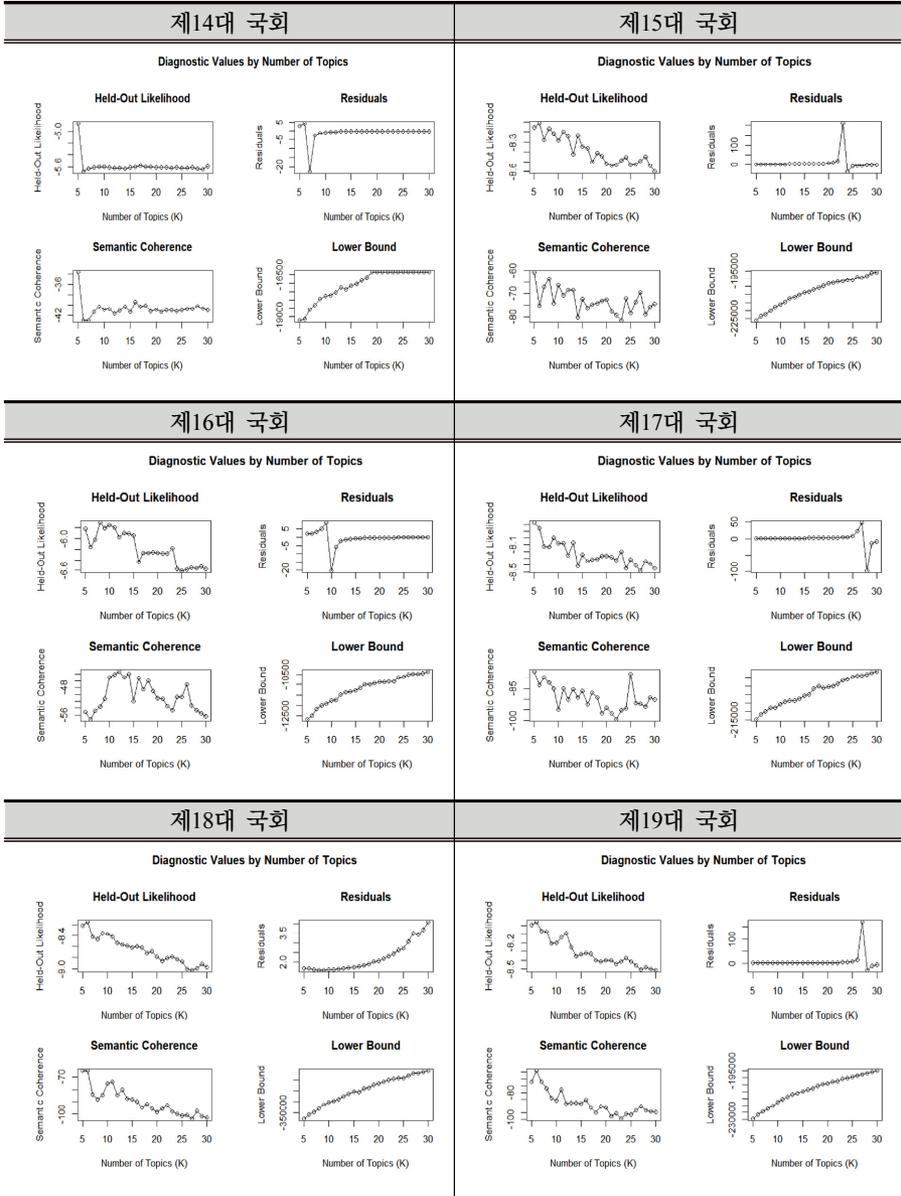
- Agency relations and problems of oversight.”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37(3): 353-376.
- Sanders, Karen B. 2020. “British government communication during the 2020 COVID-19 pandemic: learning from high reliability organizations.” *Church, Communication and Culture*, 5(3): 356-377.
- Vliegenthart, Rens, and Stefaan Walgrave. 2011. “Content matters: The dynamics of parliamentary questioning in Belgium and Denmark.”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4(8): 1031-1059.
- Wei, Xing, and W. Bruce Croft. 2006. “LDA-based document models for ad-hoc retrieval.” In Proceedings of the 29th annual international ACM SIGIR conference on Research and development in information retrieval, 178-185.
- 빅카인즈. 2024. 뉴스검색·분석. <https://www.bigkinds.or.kr/v2/news/index.do> (검색일: 2025. 1.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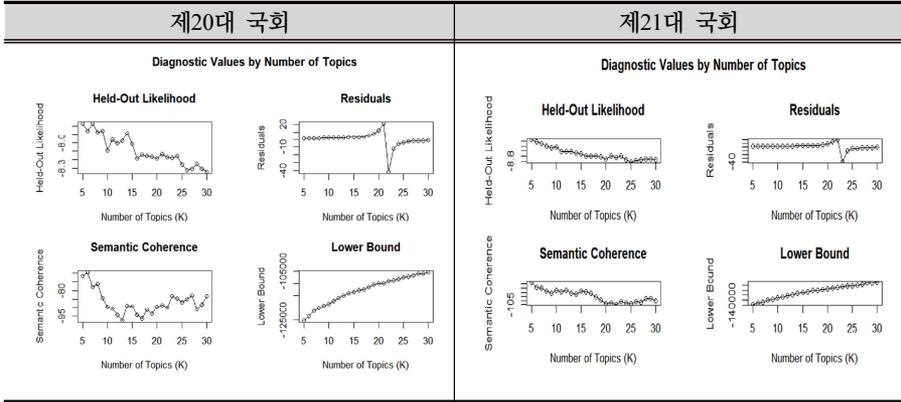
투고일: 2024.02.14.

심사일: 2025.02.23.

게재확정일: 2025.04.15.

부록 1 | 잠재토픽 개수 K 결정을 위한 진단 통계치 비교





부록 2 | 각 토픽이 발현되는 단어들

제14대 국회

Topic 1 Top Words:

Highest Prob: 율곡사업, 문민정부, 핵문제, 안기부, 그동안, 남북대화, 대북정책

FREX: 안기부, 개혁작업, 신정부, 율곡사업, 문민시대, 감사원, 미북한

Lift: 개혁작업, 국무부, 군사독재, 군인사비리, 목소리, 무한경쟁시대, 수구세력

Score: 율곡사업, 군사독재, 안기부, 신정부, 감사원, 공권력, 대북정책

Topic 2 Top Words:

Highest Prob: 김영삼, 삼풍백화점, 지방선거, 선거결과, 지방자치, 지역감정, 정치적

FREX: 세대교체, 전두환, 노태우, 부정부패, 군사쿠데타, 건축물, 범무부

Lift: 군사쿠데타, 개혁안, 건설사업, 건축물, 걸림돌, 경기도, 광범위

Score: 부정부패, 선거결과, 지방자치, 지역감정, 세대교체, 전두환, 대형참사

Topic 3 Top Words:

Highest Prob: 이만섭, 이성호, 박계동, 대정부질문, 국회법, 이부영, 민주당

FREX: 이만섭, 김영구, 이성호, 조흥규, 이부영, 박계동, 정필근

Lift: 정필근, 김영구, 이만섭, 조흥규, 답변사항, 답변지, 이야기지

Score: 이만섭, 김영구, 조흥규, 이성호, 이부영, 정필근, 박계동

Topic 4 Top Words:

Highest Prob: 외무부, 삼풍백화점, 김영삼, 지방선거, 김정일, 민자당, 대형사고

FREX: 김정일, p3c, 권력승계, 체제안정, 일원화, 제도적, 대형사고

Lift: p3c,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군사위원회, 권력승계, 당국자회의, 대외비문서

Score: p3c, 김정일, 권력승계, 체제안정, 대형사고, 인명구조, 최승진

Topic 5 Top Words:

Highest Prob: 외무부, 미사일, 인공기, 경수로, 문제점, 박명환, 지방자치단체

FREX: 박명환, 지방자치단체, 어려움, 계양사건, 공신력, 당국자, 당국회담

Lift: 계양사건, 공신력, 당국자, 당국회담, 부총리, 저자세, 경영진

Score: 미사일, 박명환, 지방자치단체, 경수로, 공신력, 부총리, 태극기

제15대 국회

Topic 1 Top Words:

Highest Prob: 신상우, 햇볕정책, 국방부장관, 그동안, 한반도, 김대중, 대북정책

FREX: 해상방위대, 신상우, 소집영장, 불고지죄, 공간기관, 농림부, 무기체계

Lift: 공간기관, 국방위원들, 동북아질서, 목포경비부, 병무비리, 비밀접촉, 서산태안

Score: 신상우, 해상방위대, 햇볕정책, 소집영장, 한반도, 접근방안, 정부여당

Topic 2 Top Words:

Highest Prob: 한반도, 우리나라, 동북아, 황장엽, 탈북자, 적극적, 러시아

FREX: 핵폐기물, 연착륙, 통일비용, 탈북자, 탈북자들, 무장공비, 접경지역

Lift: 경계태세, 국제정세, 군사시설, 무기도입, 북사태, 분단비용, 산업구조

Score: 한반도, 핵폐기물, 탈북자, 동북아, 남궁진, 경수로, 침투사건

Topic 3 Top Words:

Highest Prob: 김수환, 김영삼, 김대중, 신한국당, 의사진행, 대정부질문, 청와대
 FREX: 채영석, 이인구, 거국내각, 오세웅, 정당공천, 강삼재, 고발장
 Lift: 가신정치, 간단명료, 건강진단서, 고발사실, 공직자들, 당진제철소, 대국민담화
 Score: 김수환, 채영석, 의사진행, 이원범, 이인구, 조찬형, 김현철

Topic 4 Top Words:

Highest Prob: 김대중, 내각제, 정치적, 한나라당, 민주주의, 내각책임제, 정치권
 FREX: 세풍사건, 공동정부, 불법도청, 김대중정권, 정계개편, 지역갈등, 권철현
 Lift: 간부들, 감청문제, 개헌문제, 개헌안, 검사장들, 검찰경찰, 검찰총장추천위원회
 Score: 공동정부, 세풍사건, 기아그룹, 김대중정권, 국정원, 불법도청, 불법감청

Topic 5 Top Words:

Highest Prob: 포용정책, 햇볕정책, 한반도, 대북정책, 김대중, 통일부장관, 미사일
 FREX: 동방정책, 신한국, 국제정치, 포용정책, 관광재, 민영미, 서해안
 Lift: 간접검거, 개발사업, 개정협상, 경제교류, 난수표, 동서화합, 무역적자
 Score: 포용정책, 햇볕정책, 한반도, 금강산, 민영미, 상호주의, 신상발인

제16대 국회

Topic 1 Top Words:

Highest Prob: 열린우리당, 선거운동, 선거법, 선관위, 한나라당, 민주당, 공무원
 FREX: 선거법, 선관위, 관권선거, 신용불량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관위, 선거운동
 Lift: 신용불량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관위, 선거법, 선관위, 간접적, 개나리봉사단
 Score: 열린우리당, 선관위, 선거운동, 서비스, 관권선거, 선거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Topic 2 Top Words:

Highest Prob: 정상회담, 한반도, 햇볕정책, 핵문제, 참여정부, 고폭실험, 북핵문제
 FREX: 한반도, 대북정책, 남북관계, 지역구, 경제제재, 동북아, 경제협력
 Lift: 경제협력, 대북정책, 강경기조, 강경발언, 강원도, 개성공단, 경수로
 Score: 한반도, 정상회담, 지역구, 햇볕정책, 핵문제, 고폭실험, 평화적

Topic 3 Top Words:

Highest Prob: 사면권, 마지막, 한나라당, 사면법, 개정법률안, 개정안, 권력분립
 FREX: 사면권, 마지막, 사면법, 권력분립, 윤두환, 일반사면, 국가원수
 Lift: 국가원수, 특별사면, 간주규정, 개혁법안, 견제장치, 권력분립, 다수당
 Score: 마지막, 사면권, 사면법, 윤두환, 일반사면, 권력분립, 국가원수

Topic 4 Top Words:

Highest Prob: 핵무기, 고폭실험, 재배치, 햇볕정책, 전자투표, 찬반의원, 주한미군
 FREX: 전자투표, 찬반의원, 행정자치위원회의,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안, 이강두, 파키스탄
 Lift: 이강두, 파키스탄, 국가정보원장, 국제사회, 기술적, 김락기, 다자대화
 Score: 핵무기, 전자투표, 찬반의원, 고폭실험, 재배치, 햇볕정책, 행정자치위원회의

Topic 5 Top Words:

Highest Prob: 위원회, 법률안, 성매매, 심사보고, 보존함, 제안설명, 제안이유

FREX: 성매매, 제안이유, 주요골자, 법제사법위원회, 방송법, 문화관광위원회, 진상규명
 Lift: 방송법, 성매매, 제안이유, 공청회, 근거규정, 금융기관, 문화관광위원회
 Score: 성매매, 피해자, 법률안, 제안이유, 제안설명, 보존함, 주요골자

제17대 국회

Topic 1 Top Words:

Highest Prob: 참여정부, 양극화, 수도권,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김원기, 민주당
 FREX: 지역주의, 선거제도, 산림청, 선거구제, 정치구조, 허문석, 국방력
 Lift: 경제위, 고용불안, 공직자비리수사처, 광주광역시, 교육비, 구한말, 국가발전
 Score: 빈부격차, 양극화, 산림청, 지역주의, 비정규직, 교과서, 국방력

Topic 2 Top Words:

Highest Prob: 동북아, 한반도, 균형자론, 균형자, 한미동맹, 북핵문제, 임채정
 FREX: 균형자론, 미일동맹, 균형자, 경제외교, 연장선상, 주체적, 임채정
 Lift: 겐이치, 고압적, 관계법, 관할구역, 국회법, 기본조약, 김명주
 Score: 균형자, 균형자론, 외교안보, 교과서, 동북아, 김덕규, 남북기본합의서

Topic 3 Top Words:

Highest Prob: 이명박, 한나라당, 김경준, 광우병, 쇠고기, 대정부질문, 노무현
 FREX: 김경준, 광우병, 주가조작, 읍서닐벤쳐스, 검역주권, 대통령후보, 이병석
 Lift: bbk, nll, 계약서, 공문서, 국무총리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뉴타운
 Score: 이명박, 김경준, 광우병, 주가조작, 읍서닐벤쳐스, 검역주권, 금감원

Topic 4 Top Words:

Highest Prob: 한나라당, 노무현, 양극화, 지방선거, 윤상립, 공무원, 참여정부
 FREX: 윤상립, 론스타, 단체장, 최연희, 총리대행, 성추행, 김재록
 Lift: 검사장, 경제강국, 경제정책, 국가기밀, 기밀문서, 김재록, 동호회
 Score: 윤상립, 최연희, 총리대행, 성추행, 론스타, 김재록, 강금실

Topic 5 Top Words:

Highest Prob: 한반도, 핵실험, 한나라당, 통일부장관, 국제사회, 핵무기, 주한미군
 FREX: 인도적, 포용정책, 전쟁불사론, 전작권, 비무장지대, 럼즈펠드, 미군기지
 Lift: 각축장, 강경책, 개성공단사업, 개혁안, 검문검색, 경험사업, 공개처형
 Score: 인도적, 핵실험, 국군포로, 핵무기, 비무장지대, 파키스탄, 남북자

제18대 국회

Topic 1 Top Words:

Highest Prob: 천안함, 국방부, 가능성, 국방부장관, 감사원, 국민들, 우리나라
 FREX: 실종자, 레이더, 잠수정, 반잠수정, 잠수함, 속초함, 초계함
 Lift: 갑론을박, 경제태세, 구조작전, 군령권, 군의관, 권력승계, 기뢰탐색함
 Score: 천안함, 실종자, 잠수정, 국방부, 백령도, 전작권, 동두천

Topic 2 Top Words:

Highest Prob: 김형오, 한나라당, 민주당, 대정부질문, 정의화, 지방선거, 이명박
 FREX: 지역구민, 박연대, 김창수, 장광근, 출석요구, 방청석, 김형오

Lift: 강원도민, 강원도지사, 교섭단체대표의원, 군형법, 당리당락, 서비스업, 심대평
 Score: 지역구민, 박연대, 김형오, 대표발의, 신상발언, 김창수, 출석요구

Topic 3 Top Words:

Highest Prob: 국회의원, 이명박, 청와대, 박연차, 후원금, 압수수색, 한나라당
 FREX: 박연차, 후원금, 청목회, 정치자금, 압수수색영장, 세무조사, 천신일
 Lift: 강금원, 검찰국, 검찰보고사무규칙, 경찰들, 공공질서, 공소장, 공식성명
 Score: 박연차, 후원금, 청목회, 압수수색영장, 정치자금, 북부지검, 세무조사

Topic 4 Top Words:

Highest Prob: 이명박, 우리나라, 저축은행, 한나라당, 청와대, 신공항, 국민들
 FREX: 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은진수, 아름다운재단, 감사위원, 신축자, 박태규
 Lift: 강정마을, 공정위, 국제공항, 국토연구원, 내곡동, 농축산업, 단일화
 Score: 저축은행, 박원순, 은진수, 부산저축은행, 아름다운재단, 박태규, 등록금

Topic 5 Top Words:

Highest Prob: 이명박, 미사일, 김정일, 한반도, 통일부장관, 정상회담, 핵무기
 FREX: 아프간, 그랜드, 플루토늄, 옥수수, 탈레반, 핵무장, 사거리
 Lift: 건강이상설, 경비병, 경제위기, 계획적, 공조체제, 관제부처, 관련국
 Score: 미사일, 그랜드, 탈북자, 아프간, 플루토늄, 핵무기, 국방부

Topic 6 Top Words:

Highest Prob: 세종시, 이명박, 수정안, 수도권, 한나라당, 균형발전, 혁신도시
 FREX: 세종시, 혁신도시, 자족기능, 백년대계, 행정도시, 과밀화, 기업도시
 Lift: 독선적, 가스관, 개념도, 건교부장관, 건설청, 경상수지, 계통시
 Score: 세종시, 수정안, 혁신도시, 자족기능, 행정도시, 행정부처, 과밀화

제19대 국회

Topic 1 Top Words:

Highest Prob: 우리나라, 정갑윤, 성완중, 한반도, 교과서, 박근혜, 메르스
 FREX: 해외자원개발, 정갑윤, 군사법원, 경제활성화, 장사정보, 성완중, 국민소득
 Lift: 경대수, 경제외교, 국방백서, 대폭적, 전쟁터, 철도사업, 최규성
 Score: 정갑윤, 해외자원개발, 메르스, 성완중, 군사법원, 최규성, 별건수사

Topic 2 Top Words:

Highest Prob: 이명박, 새누리당, 박근혜, 청와대, 민주주의,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FREX: 사형제, 쌍용자동차, 양경숙, 불심검문, 실질입금, 몰래카메라, 뉴타운
 Lift: 가석방, 감사인사, 걸립들, 경선자금, 고속성장,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개사과
 Score: 사형제, 쌍용자동차, 양경숙, 성범죄, 몰래카메라, 불심검문, 최민희

Topic 3 Top Words:

Highest Prob: 박근혜, 교과서, 국정원, 청와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메르스
 FREX: 공소유지, 유가러, 정당공천, 연말정산, 과반수, 한국사, 선진화법
 Lift: 격리자, 고영주, 고용복지수석실, 골목상권, 공소유지, 교육문화수석실, 국제수입
 Score: 메르스, 정당공천, 공소유지, 유가러, 성완중, 론스타, 교과서

Topic 4 Top Words:

Highest Prob: 국민연금, 기초연금, 박근혜, 기초노령연금, 이야기, 서울시, 영상자료
FREX: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안, 구룡마을, 경남도, 기초연금, 개혁안
Lift: 개인연금,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노인들, 노후소득, 보험료, 빈곤율, 가입기간
Score: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안, 경남도, 복지부, 그래프

Topic 5 Top Words:

Highest Prob: 한반도, 우리나라, 남북관계, 국방부, 메르스, 미사일, 외교부
FREX: 탄저균, 무인기, 국방개혁, 초동대처, 재무장, 흡수통일, 대비태세
Lift: 강제동원, 개발계획, 건설사, 격리조치, 계속적, 구소련, 국가안전보장회의
Score: 탄저균, 메르스, 남북관계, 무인기, 정보보호협정, 외교부, 국민안전처

Topic 6 Top Words:

Highest Prob: 국정원, 채동욱, 청와대, 정치적, 민주당, 검찰총장, 이야기
FREX: 조선일보, 해외자원, 혼외자, 김현희, 수사팀, 정보보도, 채동욱
Lift: 민정비서관, 가정부, 가족관계등록부, 검사징계법, 검찰국, 검찰권, 검찰조직
Score: 채동욱, 해외자원, 혼외자, 조선일보, 정치범수용소, 수사팀, 윤석열

제20대 국회

Topic 1 Top Words:

Highest Prob: 미사일, 한반도, 레이더, 국방부, 비핵화, 이야기, 러시아
FREX: 군민들, 그린파인, 환경영향평가, 정전협정, 주변국, 해안포, 무력도발
Lift: 강대국, 고의적, 공청회, 교류협력, 국방백서, 군사시설, 권리의무
Score: 레이더, 비핵화, 군민들, 전자파, 종전선언, 환경영향평가, 그린파인

Topic 2 Top Words:

Highest Prob: 문재인, 청와대, 국민들, 압수수색, 자유한국당, 피의자, 부동산
FREX: 수사권, 소득주도성장, 가짜뉴스, 김경수, 인사청문회, 장자연, 드루킹
Lift: 자유시장경제, 통상적, 가짜뉴스, 강제수사, 개인정보, 개입설, 개혁안
Score: 수사권, 김경수, 소득주도성장, 문재인, 김학의, 부동산, 검찰총장

Topic 3 Top Words:

Highest Prob: 비핵화, 핵실험, 미사일, 한반도, 핵무기, 이야기, 국방부
FREX: 시리즈, 제네바, 핵실험, 선제공격, 선제타격, 평화경제, 재배치
Lift: 전략물자, c17, slbm, 갈림길, 경축사, 고고도, 고도화합
Score: 비핵화, 핵실험, 핵무기, 김정은, 레이더, 핵무장, 선제타격

Topic 4 Top Words:

Highest Prob: 코로나, 청와대, 황교안, 소녀상, 국민들, 문재인, 확진자
FREX: 코로나, 확진자, 마스크, 감염병, 구의역, 정운호, 중국인
Lift: 가슴기, 감염병, 강남역, 건설업, 공직자들, 구의역, 국가보안시설
Score: 코로나, 확진자, 소녀상, 마스크, 감염병, 구의역, 파견법

Topic 5 Top Words:

Highest Prob: 권한대행, 정세균, 박근혜, 황교안, 청와대, 미세먼지, 압수수색
FREX: 권한대행, 국정교과서, 긴급현안질문, 연구학교, 산업혁명, 정당성, 정치외교

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

Lift: 거짓말쟁이, 교사들, 교섭단체대표의원, 군사상, 권한대행, 권한대행님, 긴급현안질문
Score: 권한대행,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 정세균, 산업혁명, 긴급현안질문, 정당성

제21대 국회

Topic 1 Top Words:

Highest Prob: 윤석열, 홍범도, 오염수, 후쿠시마, 정상회담, 문재인, 강제동원
FREX: 과학적, 데이비드, 핵무장, 홍범도, 일본해, 조총련, 강제동원
Lift: 고문방지협약, 공산당원, 광복군, 광주광역시, 구명조끼, 구상권, 국제법
Score: 홍범도, 강제동원, 오염수, 데이비드, 한미일, 김일성, 정우택

Topic 2 Top Words:

Highest Prob: 문재인, 검찰개혁, 민주당, 국회의원, 추미애, 검찰총장, 공수처
FREX: 자제분, 직접수사, 국가기관, 아드님, 동부지검, 수명자, 추미애
Lift: 공소유지, 공수처법, 공수처장, 대선캠프, 대통령령, 동부지검장, 무죄추정
Score: 자제분, 아드님, 당직사병, 검찰개혁, 동부지검, 김학의, 카투사

Topic 3 Top Words:

Highest Prob: 박병석, 부동산, 기득권, 정의당, 불평등, 더불어민주당, 민의힘
FREX: 플랫폼, 피소추자, 중부세, 공공의료, 출석요구, 정치의교통일안보, 법제사법위원회
Lift: 검찰수사, 경제민주화, 근로기준법, 김용민, 김종민, 남북합의문, 단말기
Score: 출석요구, 피소추자, 플랫폼, 노동자들, 선관위, 정의당, 사회계약

Topic 4 Top Words:

Highest Prob: 한반도, 문재인, 종전선언, 코로나, 김정은, 우리나라, 미사일
FREX: 종전선언, 평화체제, 핵시설, 남북군사합의, 재가동, 교류협력, 남북한
Lift: 공공외교, 사거리, 언제쯤, 외교력, 강대국, 개발도상국, 개선책
Score: 종전선언, 평화체제, 무인기, 순항미사일, 김정은, 핵시설, 미사일

Topic 5 Top Words:

Highest Prob: 윤석열, 김건희, 고발장, 한동훈, 문재인, 민의힘, 이재명
FREX: 김건희, 정점식, 도이치모터스, 범죄일람표, 추가조작, 태양광, 인수위
Lift: 강병원, 검찰발, 공익신고, 공익제보자, 교도통신, 김승희, 대표이사
Score: 김건희, 고발장, 정점식, 정치검찰, 추가조작, 윤석열, 대통령실

What did the legislators ask in the Parliamentary Questions?

Kim, Jeongyeon | Yonsei University

Yang, Joonseok | Kookmi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parliamentary questions in the National Assembly from the 14th to the 21st sessions, using a Structural Topic Model (STM) to analyze patterns of agenda setting and shifts in legislative priorities. It examines how constituency characteristics, proportional representation, party affiliation, ruling party status, and seniority influence the issues raised by lawmakers. The results show that foreign affairs, security, and North Korea consistently dominate parliamentary discussions, reflecting public interest in geopolitical dynamics. Opposition lawmakers emphasize security and inter-Korean relations, while senior legislators focus on domestic issues. In addition, polarization and economic inequality have emerged as key political concerns during civilian and participatory governments, with progressive lawmakers, in particular, emphasizing structural economic issues. By quantitatively analyzing legislative discourse, this study offers insights into lawmakers' policy interests and the evolving nature of governance issues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